

통합복권(로또) 관련 법안에 대한 여성계 청원서 내용 요지

로또의 사행성 조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조성된 공익기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현재 조성된 공익기금은 복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정부부처에 한해서 배분되어 부처별로 일반기금과 함께 섞여 사용되고 있어 사용의 원칙과 용도가 명확치 않음.

8월말 정부에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지난 10월 28일 '복권 및 복권기금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 현재 정부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중.

본 청원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단체인 한국여성재단, 대한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국회의 통합복권 관련법 제정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 1)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복권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둘 것.
: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복권기금을 별도의 성격으로 특화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봄.
- 2) 복권수익금의 사용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정부 당연직 위원 반반씩 되도록 하되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50%를 유지하도록 할 것.
: 수익금 배분 사용처 및 분배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자인 시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 3) 기금 배분조항에 여성의 빈곤방지 및 저출산 대책 등 가족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여성관련 이슈 중 현재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문제와 가족관련 사업 제시.
- 4) 기금 사용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기금 사용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의 가치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제시한 것임.

결 다루는 모든 위원회 구성은 수익금 배분 사용처 및 분배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자인 시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민간위원 참여가 반드시 총 위원수의 반 수를 차지해야한다. 즉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반반씩 구성되어야 하며, 이 때 민간 위원은 복

위원회 구성

위원장인사말 |
 위원명단 |
 소위원회 |
 직원명단

위원주소록

위원정수	현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비교섭단체	열린우리당주비위원회
20	20	11	5	1	3

구성	위원명	소속정당 (선거구)	전화번호 (호실)	학력 및 경력	보좌진
위원장	 이재창(李在昌)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시)			황진배 이재안 강상원
간사	 김부겸(金富謙)	열린우리당 주비위원회 (경기도, 군포시)			문인철 이진수 이경훈
간사	 임호성(嚴虎聲)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문형욱 조정화 계충민
간사	 조재환(趙在煥)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장장수 조종훈 민현석
위원	 김만제(金滿健)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최윤영 최충원 김대현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김순택
허승
전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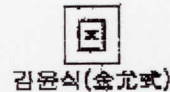
위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감)

박용관
이희준
이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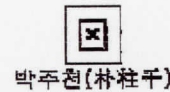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시읍)

권병학
김용석
김성수

위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김해익
박철산
원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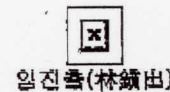
위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

박병철
박철호
이동빈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박정림
오희정
강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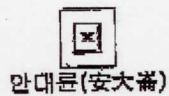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시)

문상량
박호남
송재욱

위원



안대운(安大暲)

자유민주연
합
(비례대표,
비례대표)

김민호
성거혁

위원



이해준(李海瓚)

올림픽우리동
주비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

이광진
임권주
김남수

TOP

청원취지

기존 복권산업의 과다경쟁 해소 및 비용절감과 공익기금 조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로또복권이 2002년 12월 2일 발매 이후 '로또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복권판매 열기로 로또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편, 특히 예상을 훨씬 넘는 판매액으로 인해 그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 역시 올 연말 1조 5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익기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재단은 복권산업의 과열경쟁과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은 물론 복권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건전한 복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통합복권(로또)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복권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하고 공익적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야말로 사행산업으로 흐르기 쉬운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는 핵심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로또 복권 수익금 사용은 기존의 사용처와 사용방식에 대한 엄밀한 재평가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복권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수익금의 투명하고도 공익적인 운용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논의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정한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발전적인 통합복권 관련법 제정방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여성단체들은 국회의 발전적인 통합복권 관련법 제정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1)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복권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둘 것, 2) 복권수익금의 사용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정부 당연직 위원 반반씩 되도록 하되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50%를 유지하도록 할 것, 3) 기금 배분조항에 여성의 빈곤방지 및 저출산 대책 등 가족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4) 기금 사용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내용

1. 법제정 취지의 적합성

복권산업의 과열경쟁과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은 물론 복권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통합복권(로또) 관련 법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특히, 많은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하고 공익적인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사행산업으로 흐르기 쉬운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는 핵심적 사항이다. 이 점에서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전담부서 관련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입법예고한 통합복권 관련법안("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 관리를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복권기금을 별도의 성격으로 특화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올해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복권기금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일반회계와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권수익금 사용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운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복권(제도)심의위원회 및 수익금 사용 관련 별도 위원회 구성

복권의 발행, 관리,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주무부처 기구 내에 '복권(제도)심의 위원회' 또는 '사업선정위원회' 등과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좀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통해 지나친 사행이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소비자 만족이 실현되도록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권(제도)심의위원회 및 사업선정위원회 등과 같이 복권 수익금의 사용을 직접 다루는 모든 위원회 구성은 수익금 배분 사용처 및 분배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자인 시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민간위원 참여가 반드시 총 위원수의 반 수를 차지해야 한다. 즉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반반씩 구성되어야 하며, 이 때 민간 위원은 복

권산업 전문가, 소외계층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 중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권수익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수익금 배분 및 사용과 더불어 일반 배분용도에도 성인지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차지해야 하며, 위원장도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4. 기금의 배분 및 용도 관련

법률안 제정시 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여성과 가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확충이 시급함을 수년간 지적해왔으며, 특히 구체적인 현실과 여러 연구를 통해 '빈곤여성의 자립지원, 저출산 문제 등 가족관련 중장기 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강조해 왔다.

실제 여성을 위한 예산이 과소하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는데, 2003년 여성부 소관 총 예산은 435억 5천여만원으로 올해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111조 6,589억원)의 0.039% 정도에 불과하며, 2002년 중앙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총 3,028억원으로 동일연도 일반회계 예산(105조 9천억원)의 0.29%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성관련 예산이 협소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동안, 빈곤여성가구주 문제를 포괄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 심각성에 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재원마련의 부재로 소외되어왔다. 한편, 가족관련 사업도 저출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가족기능 약화,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 다각도의 종합적인 접근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복권발행부처의 기금 목적사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금번 통합복권 수익금 사용 영역에 또다시 여성 및 가족관련 사업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이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률안 제정시 기금의 '배분 및 용도' 조항 내에 반드시 "여성의 빈곤방지와 저출산대책 등 가족관련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5. 기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성별영향 평가 관련

금번 통합복권 관련법 제정의 기본 취지가 기금 사용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에 있는 만큼, 복권산업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의 가치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사용의 영역인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사업에 쓰인 기금이 남녀수혜자중 성별로 어떤 규모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성별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기금사용의 성별영향평가는 기금의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성과 평등성을 담보하게 해줄 것이다. 통념상 대부분의 기금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남녀 모두가 공정한 수혜자일 것으로 인식되지만, 여성단체들의 성인지 예산분석 결과, 예산은 성별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으며, 과소예산, 오용과 남용의 예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기금사용정책과 예산배정에서 젠더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통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법률안에 기금사용의 성인지성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청 원 인

성 명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영 숙 (인) 외 4 인(법인)

주 소 : 

전화번호 : 